

## 특정비밀보호법

우라베 노리호(浦部法穂)

호각칸(法学館)헌법연구소 고문

2013년 12월 9일

‘특정비밀보호법’이라는 터무니 없는 법률이,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일체의 설명조차 없이 여당의 강행처리로 성립되어 버렸다. 작년 중의원 선거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그 누구도 또한 어떤 정당도 이런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 갑자기 제출되었으며 강행처리 되었다. 퍼블릭 코멘트<sup>1</sup>도 통상적인 기간보다 짧게 마감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코멘트의 77%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또한 중의원에서 처리되기 전날, 후쿠시마(福島)에서 열린 지방공청회에서는 자민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전원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 의’는 일체 모른 척하고, 야당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민주국가에서는 금세기 최악’(미국 지식인의 지적으로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의 법률이 강행처리로 가결된 것이다. 자민당의 이시바(石破) 간사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데모를 “테러와 본질적으로 다름없다.”고까지 말했다. 테러에 관한 정보는 이 법률이 정하는 ‘특정비밀’의 대상이 되므로, 데모의 규제에 관련된 정보도 ‘특정비밀’이라는 말일 것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앞으로 3년 동안은 선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다수에 기대어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은 다하겠다는 정치가 드디어 그 속내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1.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의견 공모 절차, 의견 제출 제도)란, 공적 기관이 규칙 또는 명령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 공공으로부터 널리 의견, 정보, 개선안 등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위키미디어 일본사이트 <http://ja.wikipedia.org>에서 인용.역자 주).

신문이나 민주당 등도 이 ‘특정비밀보호법’은 관료가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이미 이에 앞서 성립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설치법, 연말에 각의결정이 예상되는 무기금수원칙의 철폐, 내년엔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금’, 머지 않아 주장될 ‘일본판 CIA(또는 “007”의 영국 SIS) 창설 등과 한 몸이며, 아베(安倍) 정권이 향하고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전쟁하는 나라’로 가는 한 걸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를 위한 법률이라기 보다는, ‘우익 군국주의자’들을 위한 법률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판 NSC’의 경우에는 민주당도 찬성하였으며, ‘특정비밀’에 대해서는 반대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신문들도, ‘일본판 NSC’에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이 법률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베 정권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억지로 성립시킨 까닭은 ‘일본판 NSC’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또는 영국도 포함)으로부터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나 영국의 SIS와 같은 정보·첩보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밀보전이 절대 조건이며, 일본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비판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미국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었을 때는 미국과의 정보 공유가 불가결하며, 미국과의 공동군사행동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반대론이 분출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전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러한 줄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보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미국 등이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에게 유리한 정보 즉, 미국의 편익에 따라 일본을 움직이게끔 하는 정보만일 뿐이다. 일본에게 필요한 정보일 지라도 미국에게 불리한 정보를 미국이 일본에게 제공해 준다는 일은 100% 있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CIA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또는 미국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거짓 정보를 날조하여 퍼트리기까지 한다. “후세인 정권이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로 이라크 전을 시작한 구실을 만들어 낸 것처럼. 이렇듯 오로지 미국에게 유리한 정보에만 기대어, 게다가 때로는 여론조작을 위해 거짓까지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기대어 일본은 미국과 하나가 되어 군사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면에서도 미국의 뜻대로 움직인다. 미국을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가 전선에서 싸운다. ‘일본판 NSC’, 특정비밀보호법,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귀결은 이러한 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보수집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 일본에게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상정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우익 군국주의자’들은 ‘일본판 CIA’의 창설을 외칠 것이다. 실제로 아베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드는 이상, 특정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또 하나는 무기수출원칙의 철폐이다. 이것과 ‘특정비밀보호법’이 결부되면 어떤 무기를 어디에 팔았는지, 어떤 무기개발을 위해 어떤 군사기술을 어디에 제공하였는지 등의 사실은 모두 비밀로 취급된다. 국민의 눈에서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일본의 군수산업은 점점 비대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일본은 최신에 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이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헌’을 기다리지 않고도 일본국헌법은 실질적으로 폐기될 것이다. “나치의 수법을 따라 하면 어떤가”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아소(麻生) 부총리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지금 아베 정권은 그가 말한 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중국의 위협’을 소리 높여 외친다. 일본 자신은 훨씬 이전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론 조작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차치하고서, 일본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JAL과 ANA에 대해 중국측의 비행계획제출 요구에 따르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똑같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간항공회사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의 요구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한국 정부도 민간항공회사가 중국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양국 모두 승객의 안전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대응을 취한 것이다. 일본만이 민간항공회사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말라 하고 있다. 승객의 안전보다 국가로서의 입장을 중시한 대응이다. 아베 수상과 자민당은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데(자민당 홈페이지의 ‘Q&A’ 참조), ‘국민의 안전’을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있어서 ‘국민의 안전’은 역시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